

與 “국민의힘, 北 원전문건에 또 북풍 기획 고질병”

민주 “삭제된 문서, 220개朴 정부서 검토…나머지도 기안 단계 문서”
靑도 “선 넘은 색깔론” 비판…국민의힘, 한반도 신경제 구상 공개 요구

북한 원전건설 추진 논란에 대해 1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망국적 매카시즘’으로 규정하며 총력 반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가세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

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방해 의혹) 고발한 제1야당이, 언론에 공소장이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북한과 연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공세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이고 망국적인 색깔 정치”라며 “야당의 수준이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개 꼬리 3년 물어도 족제비 꼬리 안 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보수 혁신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이어 부산 보궐선거마저 불리해 지니 억지 왜곡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역대 북풍

공작 중에서도 최고 악질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을 고소·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장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성 발언도 이어졌다.
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삭제된 문서) 530개 중에서 220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이고 17개가 북한 관련 자료”라며 “2007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백서와 관련 전문가 명단 파일 13개를 제외하면 직접 관련 있는 문건은 4개 정도로 축약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문건 중 2개는 외부에 게재된 논문이고, 남은 한글 문서 2개는 파일명에 ‘v1.1, v1.2’라고 붙어 있다”며 “사무관이나 주무관의 기안 단계 문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발전소 USB’ 전달도 없던 일처럼 하려다 하루도 안 돼 들통이 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 대화’ 때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학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넨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꼬집는 것이다.
국회 산업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하 데 대해 “탈원전 정책이 서울 퍼렇던 때였다.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빛선의 지시 없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아이디어로 내놓겠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USB에 원전 내용은 없었다’는 여론의 반박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예비후보도 “조직적 은폐 자체가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며 USB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문제가 된 이번 자료의 폴더명을 우리말로 ‘북풍’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뽀요이스’(pohjois)로 해놓은 점을 가리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외국어까지 동원해 꼭꼭 숨겨놓고 왜 문건을 삭제하느냐. 아마 큰 사고를 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을 속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대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극비리 원전 건설 추진’으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



문 대통령 수보회의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판사 탄핵안 161명 공동발의

4일 표결…가결정족수 넘겨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1명의 의원이 동참해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오전에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161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던”며 “사법농단을 바로 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 출범



정의당은 1일 ‘당대표 성추행 사태’와 관련 “강은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당 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1차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정도로 빼어난 반성을 통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2월 국회에서 민생 위기 극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마련을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강 위원장을 포함해 사·도당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공동기자회견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일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정화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의 작·간접적인 원인이 됐던 제주 4·3 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여순사건처럼 6·25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도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과거사정리위도 활동을 정리하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며 “제21대 일하는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0년의 과거처벌 자동폐기 돼서는 안 된다. 저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신정훈 “행정 사각지대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시급”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하순) 국회의원은 1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논의와 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31일 민주당 나주하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정부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덕 나주시의회회장, 김관용 나주시의회식업자부



장, 김준정 나주상인상목 회장, 남용식 나주혁신도시 생활성화추진경연연합회 회장, 이종범 나주시소상공인협회장, 최두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회장 등이 함께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지원 체계를 발굴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용도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집,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